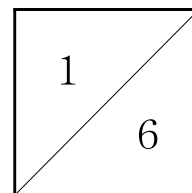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260호
의 결 연 월 일	2023. 9. 13. (제 16 차)

의  
결  
사  
항

(주)투게더앱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9. 13.

## 1. 의결주문

(주)투게더앱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투게더앱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주)투게더앱스에 대해 과징금 1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2.16.) 심의필
- 제1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9.7.) 심의필

< 별지 >

(주)투게더앱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8백만원 부과

## 2. 조치사유

### 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주)투게더앱스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X건, X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주)▲▲▲▲▲▲▲▲ 등 X개 법인<sup>1)</sup>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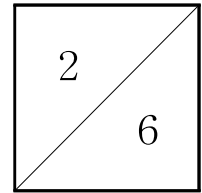
1) (주)▲▲▲▲▲▲▲▲, (주)◇◇◇◇◇◇◇◇, △△△(주), (주)▽▽▽▽▽▽

2) ①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공 개



의안번호	제260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9. 13. (제 16 차)	

(주)오아시스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9. 13.

## 1. 의결주문

(주)오아시스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오아시스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행위 및 자기계산 연계투자과 관련하여, (주)오아시스펀드에 대해 과징금 2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2.16.) 심의필
- 제1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9.7.) 심의필

< 별지 >

(주)오아시스펀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24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주)오아시스펀드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주)▲▲▲▲▲▲▲▲ 등 X개 법인<sup>1)</sup>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1) (주)▲▲▲▲▲▲▲▲, (주)◇◇◇◇◇◇◇◇, △△△(주)

2) ①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나.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는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주)오아시스펀드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 등 X명의 차주에게 연계대출 총 X건, 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XXX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하여 연계투자한도(자기자본\*의 5%)를 XXX백만원 초과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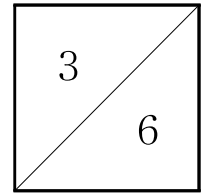
\* (2021.9말) 11억 96백만원, (2021.12말) 12억원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 등 X명의 차주에게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 연계대출 총 X건, 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XXX백만원의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실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및 제7호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5항

공 개



의안번호	제260호
의 결 연 월 일	2023. 9. 13. (제 16 차)

의  
결  
사  
항

(주)에잇퍼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9. 13.



## 1. 의결주문

(주)에잇퍼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에잇퍼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주)에잇퍼센트에 대해 과징금 1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2.16.) 심의필
- 제1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9.7.) 심의필

< 별지 >

(주)에잇퍼센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8백만원 부과

## 2. 조치사유

### 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주)에잇퍼센트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주)▲▲▲▲▲▲▲▲ 등 X개 법인<sup>1)</sup>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1) (주)▲▲▲▲▲▲▲▲, (주)◇◇◇◇◇◇◇◇, △△△(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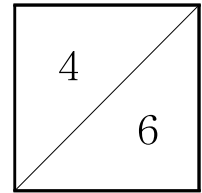
2) ①채무자를 (주)에잇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에잇퍼센트는 동 계약서가 연계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함)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②연계투자자(질권자)의 연계차입자(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참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한 점 ③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연계투자자의 대출참가금채권이 모두 상환될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공 개



의안번호	제260호
의 결 연 월 일	2023. 9. 13. (제 16 차)

의  
결  
사  
항

(주)와이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9. 13.

## 1. 의결주문

(주)와이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와이펀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주)와이펀드에 대해 과징금 1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2.16.) 심의필
- 제1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9.7.) 심의필

< 별지 >

(주)와이펀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8백만원 부과

## 2. 조치사유

### 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주)와이펀드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주)▲▲▲▲▲▲▲ 등 X개 법인<sup>1)</sup>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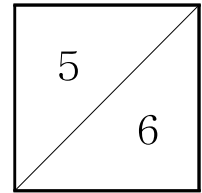
1) (주)▲▲▲▲▲▲▲, (주)◇◇◇◇◇◇◇, △△△(주), (주)▽▽▽▽▽▽

2) ①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공 개



의안번호	제260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9. 13. (제 16 차)	

(주)미래클핀테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9. 13.

## 1. 의결주문

(주)미래클핀테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미래클핀테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주)미래클핀테크에 대해 과징금 1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2.16.) 심의필
- 제1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9.7.) 심의필

< 별지 >

(주)미라클핀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8백만원 부과

## 2. 조치사유

### 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주)미라클핀테크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주)▲▲▲▲▲▲▲▲ 등 X개 법인<sup>1)</sup>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1) (주)▲▲▲▲▲▲▲▲, (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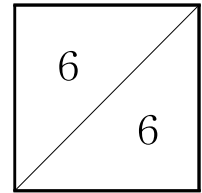
2) ①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공 개



의안번호	제260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9. 13. (제 16 차)	

(주)다운핀테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9. 13.

## 1. 의결주문

(주)다운핀테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다운핀테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주)다운핀테크에 대해 과징금 1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3.2.16.) 심의필
- 제1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9.7.) 심의필

< 별지 >

(주)다운핀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8백만원 부과

## 2. 조치사유

### 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주)다운핀테크는

202X.XX.XX. ~ 202X.XX.XX.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XXX건, XX,XXX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주)▲▲▲▲▲▲▲▲ 등 X개 법인<sup>1)</sup>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sup>2)</sup>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1) (주)▲▲▲▲▲▲▲▲, (주)◇◇◇◇◇◇◇◇, △△△(주)

2) ①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 관련규정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관 계 법 규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①~③ (생략)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 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2. (생략)
  3.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20. (생략)
- ② (생략)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5조 관련)**

1.~6. (생략)

7.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54.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3.~6. (생략)

7.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생략)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補填)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8. (생략)

**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③ (생략)

**[별표 2] 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영업정지는 위반행위별로 처분하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 조문	영업정지기간
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3개월

**[별표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을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2. 개별기준

가. (생략)

나. 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징금 금액
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2천5백만원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범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사.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4호	1,500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제10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⑤ 영 제1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금액(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 당해 연계대출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⑥ (생략)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생략)

②~⑥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9. 1.>

1. 삭 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개정 2017. 10. 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⑥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 <별표2>

#### 과징금 부과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7의2,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3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별표 2·별표 3,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자본시장법」 제349조(과징금)·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 19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별표 1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별표 2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 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 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 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 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나.~다. (삭 제)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 제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3) 삭 제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7) 삭 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7) 삭 제

-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삭 제

##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3) 삭 제
- (4) 삭 제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 제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개정 2017.10.19>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2017.10.19>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신설 2017.10.19>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10.19>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혁신과	디지털금융혁신국
연 락 처	02-2100-2530	02-3145-7120